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정국 '출렁'

한국당, '날치기' 항의·긴급 의원총회 소집...국회 일정 줄줄이 차질



홍영표 국회 정개특위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전체 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기결시키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재원 간사 등 의원들이 항의를 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정국이 출렁이고 있다.

발단은 역시나 여야의 대형 충돌이 예고됐던 정개특위였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표결 처리를 추진하려 하자 한국당은 '날치기'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한국당에선 나경원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도 대거 정개특위 회의장으로 몰려와 홍 위원장에게 표결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홍 위원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정개특위 문제를 논의하고자 긴급 비공개 의원총회를 급히 소집해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섰다.

정개특위에서의 여야 충돌로 결

국 이날 예정된 국회 일정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일부 상임위원회에선 한국당이 퇴장을 하면서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는 등 파행을 빚거나 기약없이 연기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한창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한국당 의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퇴장했다.

정무위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인사청문회 도중 "방금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정치도의상 받아들이 수 없고 한국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민병두 정무위원장에 청문회 정회를 요청하면서 모두 퇴장했다. 한국당의 기습 보이콧으로 정무위는 청문회를 오후 2시에 재개할지 여부에 대해 여야 간사가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역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던 중 한국당의 긴급 의원총회 소집으로 정회됐다.

서울=김윤호 기자

“검찰 적폐” “수사정보 대놓고 흘려”...격앙된 與 사흘째 비판

민주 “무차별 압수수색 매우 부적절”
검찰 내부 ‘중립 훼손’ 반발 나오기도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사흘째 유감을 표명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을 단행했는데, 여야가 합의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방식도 대단히 문제가 크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물 제목과 내용이 언론에 고스란히 유출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후보자 가족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도 무분별하게 보도되고 있다”며 “검찰 내부에서 수사정보를 대놓고 흘리고 있는 셈”이라고 검찰을 정면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검찰 적폐’라는 격한 표현을 썼다.

조 정책위의장은 “구시대적 적폐가 또다시 반복되는 건 아닌지

매우 유감스럽다”며 “검찰은 공명정대한 수사를 통해 실제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 공표와 같은 불법적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검찰 수사가) 인사청문회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어선 안되며 법과 원칙에 입각한 검찰의 책임 있는 행동을 당부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랜 트라우마인 ‘논두렁시계’를 꺼내들며 검찰에 거칠게 각을 세우고 있다. 전날 이 해한 대표는 “(검찰이) 피의사실을 유포해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에 맞고도 있는 논두렁 시계를 갖고 얼마나 모욕을 주고 결국은 서거하게 만들지 않았느냐”고 분개하면서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적심 비판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이 대표는 “관계기관과 전혀 협의를 안 하는 전례없는 행위”라고 못박으며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고 검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반복 말라”고도 경고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나섰다. 유 이사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총정은 이해를 하나 아주 부적절하고 심각한 오버였다”며 “이번 경우는 사건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맥락이 있는데 이 맥락을 검찰총장이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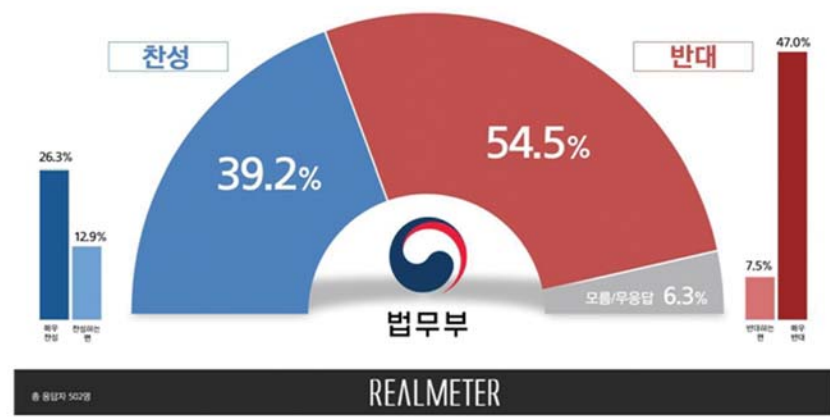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절대 해서는 안되는 피의사실 공표를 저질렀다”며 “검찰 측이 언론사의 자체 취재라고 주장하는데 말이 되느냐,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면 대체 무엇인가”고 격분했다.

여권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검찰 내부에선 중립성을 훼손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압수수색을 여당과 사전협의 하라는 뜻이라고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반대 54.5%...찬성 39.2%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민여론



국민의 절반 이상은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임명 반대는 54.5%, 임명 찬성은 39.2%로 반대여론이 우세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반대' (매우 반대 47.0%, 반대하는 편 7.5%) 응답이 54.5%로 '찬성' (매우 찬성 26.3%, 찬성하는 편 12.9%) 응답 39.2%보다 15.3%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6.3%다.

이번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매우 잘한다'고 응답한 대통령 핵심지지층(찬성 95.7% vs 반대 3.0%)에서는 찬성이 95.7%인 반면, '매우 잘못한다'고 응답한 핵심반대층(0.9% vs 97.5%)은 반대가 97.5%로,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계층별로는 보수·중도층, 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 20대와 60대 이상, 50대,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PK), 대구·경북(TK), 서울에서 반대가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반면 진보층,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 40대, 호남에서는 찬성이 대다수이거나 절반을 넘었다. 30대와 경기·인천은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

뉴스1

심상정 “선거법안 통과...12월 선거제 개혁 완료 기대”

“선거제도 개혁, ‘미션 임파서블’ 시간 지났다”

선거제도 개혁에 당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의당이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10일만에 걸친 농성을 해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일명 ‘심상정 법안’이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했다”며 “오늘 정개특위 차원에서의 선거제 개혁안 의결의 의미는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미션 임파서블’의 시간을 지났다”고 평가했다.

심 대표는 “국회위원을 3차례 하면서 국회에서 수없이 농성을 했지만 성과를 갖고 농성을 접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거제 개혁이 9부 농성을 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은 남은 3개월 간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논의에 적극 동참해 원내 5당의 합의에 따라 12월달에 선거제 개혁 완료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을 겨냥해선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 논의의 전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 합의한 결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을 계속해 왔다”며 “오늘 한국당이 정개특위 의결을 막아선 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끝까지 회의를 방해하고 선거제 개혁에 대한 어떠한 안도 내놓지 않은 채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고 역지를 부린 점은 국민의 커다란 비판 받을 것”이라며 “한국당은 뭉치 부리기에 앞서서 합리적 선거제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기회가 있음을 인식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안을 내오길 바란다”고 했다.

뉴스1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